

# 청일전쟁기, 열강과 일본의 중국침탈

조명철\*

chomc@korea.ac.kr

## Contents

- I. 머리말
- II. 청일전쟁과 서구 열강의 차관
  - 2.1. 전쟁 비용을 위한 군사 차관
  - 2.2. 전쟁 배상금과 차관 도입
- III. 열강의 이권 침탈과 영토 침탈
  - 3.1. 열강의 이권 침탈
  - 3.2. 서구 열강의 영토 침탈
- IV. 일본의 대륙 팽창정책
  - 4.1. 시베리아 철도와 일본의 반응
  - 4.2. 삼국간섭과 랴오둥 반도의 반환
  - 4.3. 식민지 대만과 복수남진론
- V. 맺음말

## Abstract

清国は日清戦争で敗戦した後、西欧の列強によって様々な利権を奪われた。重要な地域の鉄道や港が列強の手に渡された。しかし、よく見ると、列強の清国への膨張は武力によるものではなく、清国に対する外交的な仲裁、借款による財政的な支援など、清国の困った事情を助けた結果として得られた利権であった。領土に対する侵略においてもある支援に対する対価として要求される場合が多かった。さらには清国の権力者への賄賂も提供された。

これに対して日本の対清国政策は対価性のない利権の要求が多かった。こうした要求は日本の大陸政策の性格を現すものであり、日本政府の膨張要求によるところが大きかった。日本の膨張意識はロシアがシベリア鉄道の計画に対する警戒心にも表出されてあるし、北守南進論の大陸政策でも遺憾なく証明された。だから日本の大陸膨張政策を西欧の帝国主義であると規定するのは無理があると思われる。

**Key Words**: 청일전쟁, 삼국간섭, 외국차관, 팽창주의, 동청철도, 복수남진론(清日戦争, 三国干涉, 外国借款, 膨脹主義, 東清鉄道, 北守南進論)

\* 고려대학교 사학과.

본 연구는 정암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I. 머리말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청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전쟁의 결과, 조선의 영토가 점령되거나 식민지로 할양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패전국인 청국의 영토가 일본에게 잠식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1894년 8월 1일, 청국에 선전포고한 이후 일방적으로 청국을 몰아붙여 10월에는 랴오둥 반도에 상륙하여 다리엔(大連)과 뤼순(旅順)을 점령하고 다음해 2월에는 일본 해군이 청국의 주력 함대인 북양 함대를 격파하였다. 이처럼 전세가 일방적으로 전개되자, 일본에서는 청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의 식민지로 삼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sup>1)</sup> 그 대상 지역은 랴오둥(遼東)반도와 대만이었다. 육군은 랴오둥 반도를 원했고 해군은 대만을 원했다.<sup>2)</sup> 랴오둥 반도는 1895년 1월 17일, 어전회의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sup>3)</sup> 대만은 조선과도 무관하고 청일전쟁과도 무관한 지역이었지만 일본군에게 점령되어 강화조약의 결과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시모노세키(下關)강화조약의 결과, 일본은 거액의 전쟁 배상금은 물론 랴오둥(遼東)반도와 대만을 식민지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영토와 돈에 있어서 챙길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전리품을 챙겼다. 일본이 챙긴 배상금과 청국 영토는 전후 청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일본이 침탈한 랴오둥 반도는 삼국간섭으로 청국에 되돌려주었으나 그 반환 자체가 이미 열강에게 영토 침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청일전쟁 후, 청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타개하지 못한 청국은 서구 열강에게 본격적으로 잠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1897년 말, 독일의 군사력 시위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열강의 대중국 접근 방식은 냉혹한 제국주의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청일전쟁 후, 중국 분할 현상에 대한 연구는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전개 과정이라는 해석에 비중을 두고 진행되었다.<sup>4)</sup> 따라서 이 시기 일본의 대륙정책도

1) 줄고, 「20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륙정책」, 『日本歴史研究』14, 98쪽.

2) 陸奥宗光, 『蹇蹇録』 岩波文庫, 1933년, 183쪽.

3) 信夫清三郎, 『近代日本外交史』 中央公論社, 1942, 96쪽.

제국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를 경우, 서구 열강의 중국 침탈과 일본의 그것이 동일한 제국주의 현상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일본의 대륙 침략은 당시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열강의 중국 침탈과 일본의 그것을 비교하여 일본의 중국 침탈에 보이는 특징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중국 침탈은 후발 자본주의 또는 서구 제국주의로는 설명되지 않는 침략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침략주의와 열강의 제국주의가 지닌 차별성이 명확해질 때, 주변 국가에 대한 일본의 침략 행위를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정당화시키는 주장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일본의 침략주의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열강과 일본의 중국 정책과 침탈의 행위를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이권의 쟁탈에 있어서 대가성이 존재했는가이다. 즉, 이권과 영토 침탈이 대가성으로 달성된 것인가, 아니면 무대가성으로 얻어진 것인가는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과정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의 팽창주의가 자연히 부각된리라고 생각된다.

## II. 청일전쟁과 서구 열강의 차관

청국 정부는 청일전쟁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전쟁비용은 물론 패전 후의 전쟁배상금 때문에 더 많은 차관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5)</sup> 다행히 차관 도입은 열강이 서로 경합을 벌일 정도로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청일전쟁 시기에 청국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로부터 들여 온 차관의 총액은 3억량 정도지만 갚아야 할 이자를 포함하면 7억량에 이르렀다고 한다.<sup>6)</sup>

4) 井口和起, 『日露戦争の時代』, 吉川弘文館, 1998, 41쪽. 청일전쟁 이후 청국은 열강에게 분할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5) 줄고, 「20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륙정책」, 92쪽.

대규모 차관의 제공과 더불어 청국에서는 열강의 이권 쟁탈전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권 쟁탈전은 청국이 일본에게 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은 아니었다. 즉 패전의 결과 청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여 열강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식의 설명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승전국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과 무관한 열강이 중국 침탈에 나섰다는 것이다. 청일전쟁 후의 중국침탈은 승전국인 일본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 일본의 중국 침탈은 삼국 간섭으로 오히려 좌절된 면이 있지만 열강의 이권 침탈은 활발하게 자행되었다. 둘째, 열강이 청국 정부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청국 정부가 패전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쟁과 무관한 열강에게 자국의 이권을 선선히 넘겨주었을까하는 점이다.

결국, 청일전쟁 후에 청국에서 벌어진 열강의 이권 쟁탈전은 청국에 제공된 차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인 침탈에 앞서서 청국 정부에 수혈된 엄청난 규모의 차관은 열강에 대한 청국의 저항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 2.1. 전쟁 비용을 위한 군사 차관

청국 정부는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후부터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군사 차관을 여러차례 도입하였다. 이러한 군사 차관은 전쟁이 종료된 후까지도 계속 추진되었다. 청국 정부는 전쟁 초기 국내 채권을 발행하여 전쟁 비용을 해결하려 했으나 전세가 급박해지자 서둘러 외채 도입에 나섰다. 청일전쟁기에 청국이 도입한 군사 차관과 배상금 상환용 차관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상하이 양상차관(上海洋商借款)이었다. 1894년 호부에서 차관 도입이 결정되자 민대순무(閩臺巡撫)소우염(邵友濂)이 상하이 양상차관 1백50만량의 비준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50만량 정도에서 도입이 성사되었다. 이 차관은 고평은 기준으로 456,201량에 해당되며, 연이자는 7%로 높았지만 할인은 없었다.<sup>7)</sup> 이것이 바로 청국 정부가 도입한 첫 번째 군사 차관이었다.

6) 井口和起, 『日露戦争の時代』, 42쪽.

두 번째가 회풍차관(匯豐借款)이다. 1894년 11월 7일, 총리아문은 회풍은행으로부터 고평은 기준으로 1천만량(1,635,000파운드)을 차입하였으며, 연이자는 7%, 89%의 할인에, 기한은 20년으로 정했으며, 관세를 담보로 삼았다.<sup>8)</sup> 이 차관은 은가(銀價)로 계산되었으며, 회풍은행에서 관리하였으므로 회풍은행이라고도 불린다. 회풍차관은 주로 청일전쟁 시 해안 방어와 군의 장비를 갖추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청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영국의 자본을 들여왔다.

세 번째도 회풍차관이었다. 1895년 1월 26일 총리아문은 회풍은행을 통해 고평은 기준으로 18,653,961.78량(3백만 파운드)차입하였다. 연리는 6%, 95.5%의 할인이 이루어졌으며, 기한은 20년으로 정해졌다.<sup>9)</sup> 이 차관에도 관세가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자금은 영국 자본이었다. 이 차관은 금가(金價)로 계산되었고 관리은행이 회풍은행이었기 때문에 회풍방관(匯豐鎊款)이라고도 불리웠다. 이 차관은 주로 청일전쟁 기간에 방어와 기계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 종결된 후에도 청국 정부는 두 차례의 군사차관을 도입하였다. 이 두 차례의 차관은 비록 전쟁이 종결된 이후였지만 차관 논의는 전쟁 중에 진행되었고 차관의 목적도 주로 전쟁 경비에 있었고, 실제로도 군사비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두 차관도 군사차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서기차관(端記借款)으로서 1895년 6월 20일 남양대신 장지동(張之洞)이 서기양행(端記洋行)을 통해 독일국가은행으로부터 100만 파운드(庫平銀 기준으로 6,217,918량)를 도입하였으며 연리는 6%, 96%의 할인이 이루어졌으며, 강소성 염리 및 해관세를 담보로 제공했다.<sup>10)</sup> 이 가운데 126만량이 군사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방직, 철도 등의 사업에 사용되었다.

두 번째가 극룡차관(克薩借款)으로서 1895년 3월 장지동이 호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성립되었다. 1895년 6월 28일 금가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극룡방관(克薩鎊款)으로 불리는 이 차관은 100만파운드(고평은 기준으로 6,217,918량)에 달했으며, 연리 6%, 95.5%의 할인이 이루어졌다.<sup>11)</sup> 이 차관도

7) 張錫科, 「甲午戰爭清政府的軍事外債問題初探」 『青島職業技術學院學報』, 16-2, 2003, 35쪽.

8) 井口和起, 「大日本帝國の形成」 井口和起編, 『日清日露戰爭』 吉川弘文館, 1994, 8쪽.

9) 張錫科, 「甲午戰爭清政府的軍事外債問題初探」, 35쪽.

10) 張錫科, 「甲午戰爭清政府的軍事外債問題初探」, 36쪽.

11) 張錫科, 「甲午戰爭清政府的軍事外債問題初探」, 36쪽.

영국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한은 20년, 염세 이금(일종의 국내관세)을 담보로 하였으며, 주로 군사비로 사용되었다.

〈표1〉 열강으로부터 도입한 청일전쟁 비용 차관. 량은 고은평 기준으로 계산.<sup>12)</sup>

일시	차관명칭	관련국	금액	용도	연리	기간	담보
1894.9	上海洋商借款	영국	45만량	전비	7%	20년	관세
1894.11.7	匯豐借款	영국	163만파운드(1천만량)	전비	7%	20년	관세
1895.1.26	匯豐借款	영국	300만파운드(1860만량)	전비	6%	20년	관세
1895.6.20	端記借款	독일	100만파운드(620만량)	전비	6%	20년	염세
1895.6.28	克薩借款	영국	100만파운드(620만량)	전비	6%	20년	염세

앞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국 정부는 전쟁이 발발하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차관을, 그것도 불과 8개월 사이에 네차례나 도입하였다.<sup>13)</sup> 회풍차관에서 극룡차관까지 청국이 도입한 차관의 규모는 무려 4천만량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일년 예산의 50%를 넘는 규모였다. 다섯 차례의 차관 총액은 고은평 기준으로 41,545,998량에 달했지만 상환할 이자와 차관 도입시에 할인으로 미리 빠져나간 금액을 합치면 약 1억량으로 늘어난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시급한 차관에 있어서는 자본력이 가장 강한 영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sup>14)</sup> 독일의 국립은행도 적극적으로 차관 제공에 나서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부담하는 군사차관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 2.2. 전쟁 배상금과 차관 도입

청일전쟁 직후 체결된 시모노세키(下關)강화조약에 따르면 청국은 2억량의 배상금을 8차례로 나누어 일본에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이 라오둥 반도를 반환하는 대가로 청국은 전쟁 배상금 이외에 3천만량을 추가로 지

12) 井口和起, 『大日本帝国の形成』 井口和起編, 『日清日露戦争』, 吉川弘文館, 1994, 8쪽. 張錫科, 『甲午戦争清政府の軍事外債問題初探』 『青島職業技術学院学报』16-2, 참고.

13) 井口和起, 『日露戦争の時代』, 41-42쪽에는 세차례의 차관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大日本帝国の形成』(井口和起編, 『日清日露戦争』 8쪽)에는 네차례의 차관을 제시하였다.

14) 張錫科, 『甲午戦争清政府の軍事外債問題初探』, 36쪽.

불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일본군의 웨이하이웨이 주둔비용 150만량도 배상하기로 하였다.<sup>15)</sup> 이렇게 하여 전쟁 배상금은 2억3150만량으로 늘어났다. 청국 정부에 더욱 가혹한 것은 추가된 배상금을 포함한 모든 배상금을 3년 내에 청산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청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전쟁 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외국 차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상금 상환을 위해서 청국 정부는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1898년 사이에 3차례의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였는데 그 총액은 3억량에 달했다. 첫번째 차관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공하였다. 사실 러시아는 단독으로 청국에 차관을 제공하려 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하여 할 수 없이 프랑스와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1895년 7월 6일에 체결된 러·프차관은 총액 4억프랑(약 1억량)으로서 단일 차관으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였다.<sup>16)</sup> 이 차관은 상환기간 36년에 연리 4%의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러시아는 차관의 규모와 파격적인 조건을 통해 청국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한걸음 더 나가 러시아와 프랑스는 청국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특별 은행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1895년 12월에 세워진 러·청은행이었다.<sup>17)</sup> 이름은 러청은행이었지만 이사진의 대부분이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에 그 운영권은 실질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다.<sup>18)</sup>

두번째 차관은 영국과 독일의 합작으로 제공되었다. 1896년 3월 29일 청조는 영국 및 독일과 1600만파운드(1억량)에 달하는 영·독차관을 체결하고 36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였다. 상환기간은 러·프차관과 동일하지만 연리는 5%로 조금 높았다. 배상금은 3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1898년에도 배상금 차관이 이루어졌다. 1898년 3월 1일에 이루어진 세번째 차관도 영국과 독일의 합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독속차관으로 불린다. 영·독속

15) 일본은 라오둥 반도 반환 비용 3천만량이 지불될 때까지 웨이하이웨이에 군을 주둔시키기로 했는데 그 비용도 청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16) 김지환, 「제정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東方政策의 역사적 고찰」, 『中国學報』50, 2004, 178쪽 참조.

17) 井口和起, 『日露戦争の時代』, 42-43쪽.

18) C.F. 레ーマー, 東亞經濟調査局訳, 『列国の対支投資』, 1934, 610쪽.

차관의 규모는 1600만파운드(1억량)로 46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였다. 연리는 4.5%로 영·독차관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영·독속차관은 독일이 교주만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뒤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이 차관은 독일의 교주만 조차와 무관하지 않다.

〈표2〉 전쟁 배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도입한 차관<sup>19)</sup>

일시	차관명칭	관련국	금액	용도	연리	기간	담보
1895.7.6	러·프차관	러시아·프랑스	4억프랑(1억량)	배상금	4%	36년	관세
1896.3.29	영·독차관	영국·독일	1600만파운드(1억량)	배상금	5%	36년	관세
1898.3.1	영·독속차관	영국·독일	1600만파운드(1억량)	배상금	4.5%	46년	염세

청국 정부는 아편전쟁 이후 1853년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43회에 걸쳐서 외국 차관을 도입하였는데 그 총액은 약4천600만량에 달했다. 이러한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청국 정부는 재정지출에서 매년 평균 4.3%를 할당해야 했다.<sup>20)</sup> 하지만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국 정부의 해외 차관은 <표1>과 <표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전쟁 비용과 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한 차관은 모두 3억 4천만량을 넘어섰고 이 규모는 전전의 차관을 모두 합친 총액의 7.6배에 달했으며 1894년 정부 재정지출의 4.4배였다.

외국 차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리금의 상환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함께 증가했다. 이 때문에 청국은 재정 수입의 상당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해야만 했다. 일례로 1899년을 기준으로 재정수입의 25.9%, 재정지출의 22.8%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일 정도로 외국 차관은 청국 정부의 재정을 압박했다.<sup>21)</sup> 자연히 청국의 재정은 외국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sup>22)</sup>

더욱이 1900년 발생한 의화단 사건으로 청국 정부는 청일전쟁보다 훨씬 많은 4억5천만량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의화단 사건의 배상금까지 포함하여

19) 井口和起, 『大日本帝国の形成』, 8쪽. 張錫科, 『甲午戰爭清政府的軍事外債問題初探』, 36쪽.

20) 井口和起, 『大日本帝国の形成』, 8쪽.

21) 王紹坊, 『中国外交史』河南人民出版社, 1988, 247쪽.

22) 井口和起, 『日露戰爭の時代』, 42쪽.

1904년 청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환액은 약4천만량으로서 정부 세입의 41%에 달했다.<sup>23)</sup> 이와 같이 청국의 재정은 차관의 지나친 도입으로 인해 청일전쟁 후 급속히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즉, 청국 정부에 수혈된 엄청난 규모의 서구 자본은 재정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킨 반면에 열강에 대한 청국의 저항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청국은 다수의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이이제이(以夷制夷)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국에 수혈된 외국 자본은 이미 청국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단계를 지나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다. 청국 재정을 압박하는 열강의 거대 자본은 외세에 대한 청국의 저항력과 면역체계를 근저에서부터 흔들어 놓았다. 여기서부터 청국의 이권은 조금씩 열강에게 양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해의 조짐을 열강은 냉정하고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청국 내에 자국의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 Ⅲ. 열강의 이권 침탈과 영토 침탈

청일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해 진행된 제국주의적 중국분할 정책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청국의 허약한 실체가 세계에 폭로되자 청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추락했다. 따라서 열강은 청국을 더 이상 상품 시장으로만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허약한 청국에 대해 열강은 노골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것이 청국의 주요 항만과 철도 부설권, 광산 개발권 등이었다. 이와같이 열강은 이권의 확대를 통해 청국의 각 지역에 자국의 세력권을 형성함으로써 청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몰아넣었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 형성된 서구 열강의 세력권은 단순히 시장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 종국적으로 그곳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팽창정책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 모두가 경

23) 井口和起, 『大日本帝国の形成』, 8쪽 표 참조.

쟁적으로 추진하였고 일본조차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이렇게 청국의 각 지역이 열강의 세력권으로 굳어진다면 결국에 청국이 해체되어 국가의 형태가 사라진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문제는 청일전쟁 이후 청국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져 갔는가이다. 단지 전쟁에 패배로 쇠약해진 청국이 서구 열강의 강압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당시가 아무리 제국주의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이 시기 일본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분할 경쟁에서 열강에 뒤쳐진 이유는 무엇인가. 거꾸로 참전국도, 승전국도 아닌 서구 열강이 일본보다 많은 이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같은 동양 국가에 대한 일본의 동정심 또는 망설임 때문인가. 아니면 일본의 팽창 정책이 열강의 그것보다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오히려 일본은 승전국으로서 전리품을 챙기는데 있어서 지날칠 만큼 철저했고 그 점에 있어서 중국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열강의 견제가 없었다면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은 훨씬 가혹한 내용으로 체결되었을 것이고 빼앗긴 영토도 랴오둥 반도와 대만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국에 있어서 열강의 이권 획득과 일본의 그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3.1. 열강의 이권 침탈

러시아는 삼국간섭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청국이 랴오둥 반도를 되찾는데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관을 제공하는 데에도 어느 열강보다 적극적이었다. 앞서도 언급한 러·프차관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청국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1895년 5월, 러시아와 프랑스는 러·프차관을 수용하도록 청국정부를 설득하였다. 러시아의 카시니 공사와 프랑스의 제라르 공사는 영국의 방해공작을 극복하고 청국정부의 설득에 성공했다.<sup>24)</sup> 대규모 차관이 청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에는 열강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 7월 7일 러시아 신문들은 일제히

24)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2002, 386-387쪽.

러·프차관으로 새롭게 열릴 동아시아의 시대에 대해 러시아 금융계가 환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sup>25)</sup>

차관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1895년 6월, 1억량에 달하는 배상금 차관(러·프차관)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차관에 대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10년전 청국과의 전쟁에서 미진하게 남아있던 베트남과 청국 사이의 국경선을 프랑스에 유리하게 수정해줄 것과 국경지대에서의 특권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이 때문에 국경 지대의 몇몇 도시가 통상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었다. 아울러 운난(雲南)·광둥(廣東)·광시(廣西)의 광산 채굴권과 베트남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철도를 청국 영내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했다.<sup>26)</sup> 이러한 이권 획득은 러·프 배상금 차관이 체결되기 전에 모두 달성되었다. 1896년 3월에는 해남도(海南島)를 타국에 할양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청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나섰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의 공로와 청국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근거로 만주의 철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 1891년 시작된 시베리아 철도는 아무르강을 돌아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노선이 너무 멀 뿐만 아니라 하바로브스크에서 스테텐스크의 구간처럼 기술적으로 난공사 구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러시아가 생각한 해결책은 만주를 관통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직선 노선이었다. 비테는 이 철도가 완성되면 만주전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위는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sup>27)</sup>

1895년 11월에 러시아 정부는 비테의 제안을 근거로 청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청국은 자체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했

25)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14쪽.

26) 井口和起, 『日露戦争の時代』, 43쪽.

27)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20쪽. 비테는 만주횡단철도가 갖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 의미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철도는 러시아에게 블라디보스토크으로의 병력 수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도 언제든지, 최단 노선으로 러시아의 병력을 황해에 연한 만주로 그리고 청국 수도 가까이에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 지역에 상당 규모의 러시아 병력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청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어디에서나 러시아의 국위와 영향력을 대폭 증강시켜 줄 것이다.”(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19쪽.)

다.<sup>28)</sup> 그렇다고 청국이 당장 만주에 철도를 건설할 여유가 이었던 것은 아니었다.<sup>29)</sup> 이번에는 러시아 황제가 1896년 4월 18일, 북경주재 러시아 공사 카시니에게 만주 횡단철도의 승인을 청국에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4월 말까지 벌인 카시니의 교섭은 청국 정부의 단호한 거부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sup>30)</sup> 이처럼 청국 정부의 완강한 저항의 배경에는 그해 3월 말에 성립한 1억량에 달하는 영·독차관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sup>31)</sup> 이밖에도 청일전쟁 후, 주요 지역의 철도부설권이 열강에 넘어간 전례가 없었고 또 전례를 만들고 싶지 않은 청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만주 횡단철도는 러시아가 청국에 더 많은 지원과 선물을 주고 나서야 얻어낼 수 있었다. 1896년 5월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청국의 이홍장을 초청한 러시아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러·청 비밀 군사동맹을 제안함은 물론 거액의 뇌물 공세도 마다하지 않았다.<sup>32)</sup> 이홍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만약 청국이 동청철도의 부설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청국에 대한 경제적·재정적 원조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사용했다.<sup>33)</sup> 결국 1896년 6월 3일, 러시아와 청국이 일본의 공격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러·청비밀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청국은 만주 횡단 철도의 부설권을 러시아에 넘겨주고 말았다.<sup>34)</sup>

청국으로서는 전략적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의 부설권을 외국에 양도했다는 뼈아픈 전례를 남겼고 이것은 이후 열강의 유사한 요구에 대해 청국의 저

28)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참조.

29) 김지환, 「제정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東方政策의 역사적 고찰」, 180쪽.

30)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24쪽.

31)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22쪽. 말로제모프는 영·독차관으로 청국 정부의 친 러시아 세력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2) 이 때 비테가 이홍장에게 성공보수로서 3백만 루블의 커미션을 약속했다고도 한다. べ. 7. 로마ーノフ, 山下義雄訳, 『滿州における露国の利権外国史』, 原書房, 1973, 151-152쪽.

33) 김지환, 「제정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東方政策의 역사적 고찰」, 180쪽.

34) 러·청 비밀 군사동맹의 그 네째 조항에 “러시아군이 침략받을 우려가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또 저항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청국은 헤이룽강성 및 지린성을 횡단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철도의 건설에 동의하고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권리를 러청 은행에 제공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약에 기초하여 러시아 정부는 청국과 교섭하여 1896년 9월 8일, 동청철도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5참조.)

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만주를 관통하는 철도가 동아시아 질서에 미칠 엄청난 파괴력을 고려할 때, 동청철도의 부설권은 쉽사리 획득할 수 있는 이권이 아니었다. 만약 러시아의 여러가지 중재 노력, 삼국간섭, 대규모 차관 등 청국에 대한 외교적,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했다고 해도 청국이 이처럼 무력하게 동청철도의 이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국의 남쪽, 운난·광둥·광시 지역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세력권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자 영국이 견제하고 나섰다. 1897년 2월, 영국은 청국과 협정을 맺어 프랑스 세력권인 운난·광둥·광시에 몇개의 도시를 개방하도록 하여 그곳에 영국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또, 영국은 미얀마에 건설 중인 철도를 운난성의 철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권리도 획득했다.<sup>35)</sup>

다른 열강에 뒤쳐졌지만 독일도 청국 소유의 북경·천진 철도의 레일과 철도 차량 계약의 독점권을 획득하고 천진, 상하이, 한구에 조계(租界)를 확보했다.<sup>36)</sup> 이처럼 청국의 이권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열강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열강에 양도된 대부분의 이권은 열강의 여러가지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과 무관하지 않았다. 재정 지원의 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오키 주 독일 공사는 1896년 3월, 러시아 함대가 청국에 파견되는 것을 견제하기위해 독일 황제에게 저금리의 차관을 청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sup>37)</sup>

### 3.2. 서구 열강의 영토 침탈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열강의 중국 침탈은 자본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보다 노골적인 영토 침탈로 이어졌다. 그 발단은 독일이 열었다. 특히 삼국간섭 후 중국의 해안지역과 주변 도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찾고 있던 독일로서는 독일인 선교사의 살해사건이 더 없이 좋은 구실이었다.<sup>38)</sup> 1897년 11월 1일 산둥반도에서 두 명의 자국 선교사가 살해당하자 독일은 불과 6일 뒤인 11월 7일 교주(膠州)만의 점령을 독일함대에게 명령하였다. 이처럼 신속한 군사행동은 독

35) 井口和起, 『日露戦争の時代』, 43쪽.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20쪽.

36)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20쪽.

37) 日本外務省, 『日本外交書』29卷, 944쪽.

38) 줄고, 『20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륙정책』, 93쪽.

일이 이전부터 교주만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독일은 이전부터 삼국간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해군 기지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1895년 10월 29일 청국 대사들을 통해서 청국의 항구 하나를 독일에 조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sup>39)</sup> 청국은 독일의 요청을 들어주면 열강의 총체적인 영토 침탈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허용하지 않았다.

1897년 11월 13일 상하이에 정박중인 독일 함대 4척이 교주만으로 진입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교주만의 포대와 항만을 점령했다. 동시에 칭다오(靑島)를 독일의 관할하에 둘 것을 선언했다.<sup>40)</sup> 그해 12월, 독일은 청국에게 교주만의 조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은 1898년 3월, 교주만 조차조약을 체결하여 교주만 반경 50km를 99년간 조차하는데 성공하였다.<sup>41)</sup>

무력을 배경으로 한 독일의 칭다오 점령은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 왔던 열강의 인내심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독일이 1897년 12월, 청국에 교주만의 조차를 요구하고 나서자, 12월 19일에는 러시아 함대가 뤼순항에 입항하여 사태를 관망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함대는 군대를 상륙시키지는 않는 조심성을 보였다.<sup>42)</sup> 12월 25일에는 영국의 순양함 두척이 뤼순항에 들어와 러시아 함대와 나란히 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주만과 뤼순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다.<sup>43)</sup>

때마침 1897년 12월 14일 이홍장이 청일전쟁 배상금의 마지막 지불분에 해당하는 1백만량의 차관을 얻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였다.<sup>44)</sup> 러시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구의 조차, 철도부설권, 광산 운영권 등 영토 침탈을 포함한 다양한 이권을 요구했으나 청국은 차관 도입국을 영국으로 변경하는 등 선뜻 수용하지 않았다. 항구의 조차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우호 관계와 러·청비밀

39) 이규하, 「獨逸의 膠州灣의 租借와 喪失」, 『全北史學』7집, 307쪽.

40) 이규하, 「獨逸의 膠州灣의 租借와 喪失」, 307쪽.

41) 김춘식, 「독일제국의 중국 교주만 식민지 문화정책 (1898-1914)」, 『역사학연구』32집, 2008, 387쪽.

42)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52쪽.

43) 井口和起, 『日露戦争の時代』, 45-46쪽. 영국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동아시아 함대가 제물포에 집결하였고 일본 함대는 나가사키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견제하기 위해 쓰시마에 집결하였다.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57쪽, 참조.

44)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53쪽.

군사동맹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였지만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1898년 2월부터 러시아의 요구는 뤼순항 조차와 동청철도의 지선의 부설권으로 명확해 졌고 이에 청국 정부는 영국과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등, 러시아의 압박을 피하고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홍장을 비롯한 고위 정치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압박을 늦추지 않아 결국 3월 27일, 뤼순과 다리엔 항구의 조차와 하얼빈과 뤼순을 잇는 동청철도의 지선에 대한 부설권을 허용하고 말았다.<sup>45)</sup>

이에 앞서 1898년 3월 6일, 독일이 교주만 조차권과 주변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을 99년간 획득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이 청국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킨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아울러 독일이 교주만 조차에 성공한 배후에는 3월 1일에 1억량의 영·독속차관 체결됨으로써 독일이 청국 정부의 큰 짐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서구 열강은 청국에 대한 영토 침탈에 있어서도 단순히 군사력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가성의 권리로서 조차지를 요구했다. 독일의 교주만 점령 시기부터는 차관 교섭 과정 중에 이권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러시아는 뤼순항을 조차함으로써 오랜 숙원인 부동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조약들을 통해 뤼순항을 군항으로, 다리엔을 무역항으로 삼았다. 물론 조약에 따르면 군항인 뤼순항을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청국함대 뿐이었다. 또한 조차지의 주변 60마일까지 중립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지역의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을 러시아가 독점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으로 청국 군대가 진입할 경우 러시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sup>46)</sup> 이러한 조항은 굴욕적인 차원을 넘어서 조차지를 중심으로 식민지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했다. 189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청국 전역에서 전개된 서구 열강의 노골적인 영토 침탈은 만주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 러시아가 있었다.

이번에는 영국이 가만 있지 않았다. 영국은 그해 6월, 홍콩섬에 머물렀던 조차지역을 구룡(九龍)반도 전체로 확대하고 조차기간도 그 때부터 99년으로 변

45)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156쪽.

46) 줄고, 『20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륙정책』, 94쪽.

경하였다. 다음 달에는 랴오둥 반도를 조차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산둥(山東)반도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조차하면서 러시아가 뤼순을 점령하고 있는 한 영국은 웨이하이웨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해 11 월에는 프랑스도 광조우만(廣州灣)에 대한 99년간의 조차조약을 맺었다. 서구 열강은 청국의 주요 항구들을 거침없이 잠식해 갔지만 청국은 서구 열강의 파상적인 공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898년은 청국의 영토분할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기록적인 한 해였다. 분할의 방식도 실행사를 앞세운 전형적인 제국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열강의 중국분할 정책은 조차지를 획득한 후 주변의 광산채굴권과 공장설립, 철도부설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차지를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열강의 세력권이 구축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만주지역은 러시아가, 산둥·허난(河南)지역은 독일이, 산시(山西)·스촨(四川)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구이저우(貴州)·광시·윤난 지역은 프랑스가 각각 장악해 나갔다.

## IV. 일본의 대륙 팽창정책

### 4.1. 시베리아 철도와 일본의 반응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의 대중국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성격은 어떠한 것이었나. 1890년, 이홍장이 만주 철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영국인 철도 기술자에게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자 이에 자극받은 러시아는 1891년 3월 서둘러 시베리아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시베리아 철도는 1892년 재정대신에 취임한 비테에 의해서 크게 진척되었다. 비테는 시베리아철도야말로 동아시아에서 다른 열강과의 경쟁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보았다.<sup>47)</sup>

만주에 대한 청국의 철도 계획이 러시아를 자극했듯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계획은 일본을 자극하였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계획이 일본에 전해진 것

47) 로마노프, 『滿州における露国の利権外国史』, 74-78쪽.

은 시베리아철도가 착공되기 일년전인 1890년 초였다.<sup>48)</sup> 철도를 앞세운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은 일본의 지도층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당시 수상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외상인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외교전략론’이라는 문서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논했다.

국가독립 자위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른바 주권선을 지켜 타인의 침략을 허용치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익선을 방어하여 자신의 우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이익선의 핵심은 실로 조선에 있다. 시베리아철도는 이미 중앙아시아로 뻗었고 수년이 지나지 않아 준공에 이르면 러시아 수도를 떠나 십수일만에 헤이룽강에 도착하여 말에 먹이를 줄 수 있다. 우리는 시베리아 완성의 때가 곧 조선에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sup>49)</sup>

야마가타 수상은 시베리아철도가 일본의 ‘이익선’인 조선을 심하게 압박하여 결국 조선에서 러·일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이 러시아의 영토에 놓이는 철도의 건설 계획에 대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베리아 철도가 지닌 군사 전략적 의미를 과대하게 평가한 부분도 있지만 조선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자신들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권선과 이익선은 야마가타 수상이 1890년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선포한 정책론으로서 일본 대외정책의 기본축을 이루는 팽창논리였다. 요약하자면 이익선 안에 팽창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국가의 대외정책을 그쪽으로 몰고가는 다분히 선협적이고 경직된 외교 논리였다. 이 논리가 강하게 주장되면 일본의 이익선을 위협하는 세력은 곧 주권선을 위협하는 세력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그 위협을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야마가타의 문건에 대해 외상 아오키는 그해 5월, ‘동아시아 열국의 형세’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각료들에게 돌리고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육군차관 가츠라 타로(桂太郎)에게 보냈다. 그 가운데 “구미열강 가운데 가장 우려스럽고 항상 위협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러시아”라고 단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48) 信夫清三郎, 『日本外交史I』, 毎日新聞社, 1974, 151쪽.

49) 大山梓,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6, 196-197쪽.

러시아는 시베리아철도 건설계획을 결정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종점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고 그 노선이 청국의 북쪽 국경과 병행한다고 한다. 그 건설도 정부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철도를 이용하여 러시아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바로 정예군을 광할하고 거의 수비도 없는 청국의 국경이나 일본의 코앞에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일·청 양국은 이 철도부설계획을 곧바로 러시아가 시베리아지방에 강대한 병력을 실제로 증가시킨 것과 동일한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sup>50)</sup>

무엇보다 시베리아 철도는 그 계획만으로도 일본에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계획 속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실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은 극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는 성향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세력권에 대해 매우 강렬한 방어 본능을 갖고 있었다. 이미 일본의 세력권이라고 여겨지는 조선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비록 그것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강렬한 방어 의식을 보여주었다.

강한 방어 의식은 강한 팽창 의식의 또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방어선을 설정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강력한 팽창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시베리아 철도가 착공되기도 전에 이미 시베리아 철도로 초래될 러시아와의 대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 4.2. 삼국간섭과 라오둥 반도의 반환

일본이 주장한 청일전쟁의 명분은 조선을 중주국인 청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조선은 1890년에 일본의 이익선으로 규정된 바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조선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라는 팽창 의식 속에서 1894년 8월 1일, 청일전쟁을 감행했다.<sup>51)</sup>

전쟁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어 1894년 10월 일본군이 만주

50) 坂根義久校注, 『青木周藏自伝』, 平凡社, 1970, 101-102쪽.

51) 당시 조선은 일본에 있어서 절대적인 상품시장도 원료공급지도 아니었다. 따라서 서구 제국주의 논리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로 진격하자 일본은 만주에 일본의 식민지 건설을 꿈꾸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본군이 다리엔과 뤼순을 점령하고 다음해 2월에 청국의 주력 함대인 북양 함대를 격파하자 랴오둥 반도의 항구적인 점령을 당연시 하게 되었다. 일례로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외상은 일본군이 뤼순을 점령하자마자 이토(伊藤)수상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고 청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단지 청국을 바다에서 막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상당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고 지적하면서 랴오둥 반도야말로 청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일본의 우위를 보장해 주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조언했다.<sup>52)</sup>

랴오둥 반도가 지닌 전략적 가치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랴오둥 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발상은 방어적 본능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팽창 요구의 표출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랴오둥 반도는 조선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대륙으로의 팽창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에 가깝다. 결국, 어전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1895년 1월 17일, 일본은 강화 조약에 랴오둥 반도의 할양을 포함시키기로 정식 결정했다.

1895년 2월, 일본과 청국의 강화회담이 개시되기 전부터 강화조약에 랴오둥 반도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열강의 경고가 있었지만,<sup>53)</sup> 일본은 아랑곳 않고 강화조약에 랴오둥 반도와 대만의 할양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1895년 4월 17일, 랴오둥 반도의 할양이 포함된 시모노세키(下關)강화조약이 체결되자 불과 6일만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로부터 이른바 삼국간섭이 나왔다. 삼국간섭의 주체는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비테를 중심으로 단호한입자를 정리한 후에,<sup>54)</sup>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 공동간섭을 제의하여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와 독일의 동의를 얻어냈다.

삼국의 항의 각서에는 모두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소유하게 되면 언제든지 청국의 수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 장래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장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문

52) 『伊藤博文伝』下, 春嶺公追頌会, 1940, 140쪽.

53) 稲坂吉, 『近世支那外交史』, 明治大学出版社, 1929, 109쪽.

54) 로마노프, 『滿州における露国の利権外国史』, 96-97쪽.

구가 첫머리에 삽입되어 있어서 누가 보아도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sup>55)</sup>

여기서도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차지할 경우,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기능보다 청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즉 일본이 랴오둥 반도까지 먹어 버리는 것은 근거 없는 팽창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각서에서 “삼국과의 싸움은 애초부터 일본에게 (승리할) 희망이 없는 것이니 귀국은 이일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협박투의 표현까지 사용하여 일본을 압박했다.<sup>56)</sup> 일본은 삼국간섭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4월 30일, 각의를 열어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sup>57)</sup> 이렇게 삼국간섭에 굴복한 일본정부는 5월 8일, 청국과 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11월 8일에는 3천만량을 받는 조건으로 랴오둥 반도 환부조약에 조인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어느 열강도 감히 손대지 못한 청국의 영토를 식민지로 삼고자 했다. 물론 영국이 홍콩섬을 조차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일본처럼 랴오둥 반도와 같이 북경에 그접한 요충지를 식민지로 강탈한 예는 없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강력한 힘을 통해 실현시켰으나 보다 큰 열강의 힘에 의해 토해내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삼국간섭을 받아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는 과정을보면 일본의 팽창주의가 대단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힘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 4.3. 식민지 대만과 복수남진론

일본은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되돌려 주었지만 그 왕성한 팽창 욕구는 새로 획득한 대만 식민지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대만 작전은 일본군이 1894년 11월 21일 뤼순항을 점령한 후, 동계 작전의 하나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sup>58)</sup> 대만 점령은 육군보다는 해군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sup>59)</sup> 이토 수상

55) 『日本外交書』, 28卷, 2冊, 17-18쪽.

56) 『日本外交書』, 28卷, 2冊, 17-18쪽.

57) 中塚明校注, 『新頂蹇蹇録』, 岩波書店, 1983, 307쪽.

58) 줄고, 「20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륙정책」, 98쪽.

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 실세들도 대만 점령을 지지했다. 원로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도 12월 11일, 이토 수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디 대만을 신속히 점령하는 작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계작전으로도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고 간청하고 있다.<sup>60)</sup> 마쓰가타가 전쟁의 실질적인 지휘자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참모차장에게 보낸 의견서를 보면 대만 점령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가 대만을 영구히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각하가 잘 아시는 바입니다. 최근 구미의 신문조차 청국 공격의 목적은 대만점령에 있다고 평할 정도입니다. 대만은 우리의 남쪽 관문으로서 남방으로 대일본제국의 판도를 팽창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북을 지키고 남을 공략’ 하는 방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지식인들이 일찍이 간파한 바로서 대만은 마침 그 첫번째 발판으로서 남쪽의 제반도 및 남양 제군도에 미칠 수 있는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무역, 식민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sup>61)</sup>

여기서 마쓰가타가 단지 대만 점령을 호소하기 위해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쓰가타가 대외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은 이제 한반도를 거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북진론을 버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북수남진론’이 등장한 것이다.<sup>62)</sup>

일본이 라오둥 반도를 반환한 후, ‘북수남진론’이 크게 유행하면서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축을 형성했다.<sup>63)</sup> 처음에 ‘북수남진론’에 시큰둥했던 육군의 지도

59) 陸奥宗光, 『蹇蹇錄』, 183쪽.

60)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会, 『伊藤博文關係文書』7권, 塙書房, 1979, 155~156쪽.

61) 徳富蘇峰, 『公爵桂太郎伝』乾卷, 原書房, 1967, 548-549쪽. 인용문 중의 인용부호는 필자에 의한 것.

62) 마쓰가타가 북수남진론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북수남진론의 기본적인 구상은 1894년 10월에 구가 가쓰난(陸羯南)이 『日本』에 「外政策」이란 제목으로 7회에 걸쳐서 게재한 바 있었다. 박양신, 「청일전후 일본 지식인의 대외인식론-陸羯南과 徳富蘇峰을 중심으로-」(『東洋學』31집, 동양학연구소, 2001년)참조. 줄고, 「의화단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변화」(『梨花史學研究』29, 2002)참조.

63) 줄고, 「20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륙정책」, 103쪽.

자들도 대부분 북수남진론자가 되어 대만을 중심으로 일본의 팽창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육군 중장 가쓰라 타로는 1896년 6월 대만 총독에 임명되자 대만 식민지 통치는 남중국 즉 “푸젠(福建)과 아모이(廈門)를 경영”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고 하여 청국의 남부 지방에 대한 팽창 욕구를 숨기지 않았다.<sup>64)</sup>

가쓰라는 대만 총독으로 부임하자 일본의 세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푸젠 일대의 지역을 우리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우리 세력을 부식·양성하고자 한다면 아모이 항구와 긴밀히 교류하고 푸젠 지역에 은밀히 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었다.<sup>65)</sup>

북수남진론은 실제로 대만 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1898년 2월 가쓰라의 후임으로 제4대 대만총독으로 부임한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 육군 중장은 대만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1899년 3월 ‘대만 사업공채법’을 성립시켰는데 주목할 것은 대만에 대한 시설투자가 대만 방위와 푸젠성 방면으로의 군사행동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sup>66)</sup> 뿐만 아니라 고다마 총독은 푸젠성 성도인 푸저우(福州)에서 한자신문을 발행하고 대만은행의 지점을 설치하는 한편 푸젠성 주요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일본의 세력을 부식시키고자 노력했다.<sup>67)</sup>

1898년 4월 이토 수상은 청국이 분할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청국정부와 ‘푸젠성 불할양에 관한 교환공문’을 교환했다. 나아가 그해 5월에는 푸젠성에서의 철도부설 우선권을 일본에 부여하도록 청국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부설권의 ‘예약’은 일본에게 푸젠성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반대여론에 부딪쳐하는 수 없이 청국이 푸젠성내에 철도를 부설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정부와 상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타협이 성립했다.<sup>68)</sup>

1900년 3월, 야마가타 수상은 각의에서 결정된 ‘일청철도협정안(日清鐵道約定案)’에 따라 청국에게 푸젠·장시(江西)·후베이(湖北)·저장(浙江), 네개 성

64) 『公爵桂太郎伝』乾卷, 706쪽.

65) 『公爵桂太郎伝』乾卷, 710쪽.

66)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南窓社, 1997, 29쪽.

67) 宿利重一, 『兒玉源太郎』, 対胸舎, 1938, 342-45쪽.

68) 『日本外交文書』31卷, 1冊, 504-506쪽.

을 관통하는 철도부설권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인·경부 두 철도의 부설 자금조차 없던 일본이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대륙의 철도 부설권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철도부설권의 요구는 열강이 푸젠성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미연에 견제하기 위한 방해 공작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일본의 요구는 6월 5일에 청구정부에 제출되었지만 교섭 중에 의화단사건이 확대되어 일본의 의도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sup>69)</sup>

일본의 청국에 대한 이권침탈은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철도부설권을 비롯한 이권 요구는 어떤 재정적 또는 정치적 기여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의 대가성을 전혀 띠지 못했다. 즉, 일본은 대가성이 없는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을 통해 청국으로부터 이권을 쟁탈하고자 했다. 대가성이 없는 침탈은 그 규모에 따라서 약탈 또는 침략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적 특성은 제국주의보다도 훨씬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침탈로서 별도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청국에 대한 영토침탈에 있어서도 일본은 전혀 대가성을 띠지 못한 형태로 감행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모이 항구 점령사건이었다. 1900년 8월 14일에 북경이 함락되고 불과 10일 뒤에 일어난 일본군의 아모이 점령사건은 대만을 중심으로 대륙으로 팽창하고 싶은 성급한 욕구가 빚어낸 해프닝이었다. 아모이에 있는 일본 사찰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의 포교소에 화재가 발생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 해군과 육군은 자국민 보호라는 구실로 아모이 항구에 상륙하여 군사점령을 획책하였다. 아모이 점령 사건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일이었고 이미 천황의 재가도 받아놓은 상태였다.<sup>70)</sup> 하지만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항의하자 일본정부는 육해군과 대만총독부의 독주에 의해 촉발된 우발적인 사건으로서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이어서 아모이 항구에서 상륙부대는 곧바로 철수하고 말았다.

아모이 점령 사건은 너무 짧은 시간에 완벽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의 침략주의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푸젠성에 일본의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북수남진론의 핵심 과제였다.

69) 『日本外交文書』33卷, 1冊, 261-264쪽.

70)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38쪽.

이 부분은 아마가타 수상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아모이 점령 사건이 일어나기 수일 전인 8월 20일, 아마가타 수상은 자신의 의견서에서 “이 번 기회를 틈타 조선을 점령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은 러·프·독과 전쟁을 벌이자는 것과 같다고 일축하면서 일본은 주변정세를 고려하여 ‘복수남진의 국시(國是)’를 취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sup>71)</sup> 또 국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푸젠성과 저장성의 요충지를 점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sup>72)</sup>

열강과의 외교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토 히로부미 등에 의해 저지되기는 했지만 대만 총독부의 강경한 복수남진론자들은 아모이 점령을 끝까지 고집하며 철병에 반대했다.<sup>73)</sup> 정부의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또 푸젠성 진출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던 만큼 아모이 점령의 실패로 꺾어야 했던 일본 정부의 충격과 좌절은 적지 않았다.<sup>74)</sup> 때문에 청일전쟁후 일본의 대륙정책이 의화단 사건을 경계로 크게 바뀌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sup>75)</sup> 즉 하문출병사건은 복수남진론이 좌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sup>76)</sup>

일반적으로 청일전쟁 후 전개된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과 영토 침탈을 명확히 구분하고 않고 중국 분할 정책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정리해왔기 때문에 청국에 대한 일본의 팽창정책도 당시 서구 제국주의의 흐름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sup>77)</sup> 하지만 일본은 청국의 이권을 획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영토에 대한 침탈에 있어서도 열강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분류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골적인 침략주의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71) 『山県有朋意見書』, 261-262쪽.

72) 『山県有朋意見書』, 263-264쪽.

73) 『伊藤博文秘録』(복간본), 原書防, 1982, 133쪽.

74) 江口圭一, 『日本帝國主義史研究』, 青木書店, 1998, 115쪽.

75)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17쪽. 井口和起의 『日露戦争の時代』, 59쪽 참조.

76) 井口和起, 『大日本帝國の形成』, 15쪽. 줄고, 『20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륙정책』, 107-110쪽 참조.

77) 井口和起, 『大日本帝國の形成』, 12쪽.

## V. 맺음말

서구 열강의 이권침탈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대가성으로 달성되었다. 전쟁에 대한 외교적 중재, 차관을 통한 재정 지원 등 대부분이 청국의 곤란한 사정을 지원해준 반대급부로서 얻어낸 결과들이었다. 영토침탈 조차도 어떤 시혜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되어 질 때가 많았고, 그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핵심 권력자에 대한 뇌물의 대가로서 영토침탈이 이루어졌다.

청국 정부에 대한 서구 열강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청국정부의 저항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따라서 외세에 대한 청국 정부의 저항력 약화를 단순히 청일전쟁의 패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승전국인 일본조차도 청국에서 이권쟁탈에 크게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쟁과 무관한 열강이 수많은 이권을 획득하고 항구 등을 조차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국 정부에 기여한 바에 대한 일종의 권리 주장과 같은 명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에 비해 일본의 대륙정책은 대가성이 아닌 노골적인 침략주의에 가까웠다. 일본에는 이권과 영토가 주고 받기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했다. 이것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전리품을 챙기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전후 새롭게 등장한 외교정책인 복수남진론을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복수남진론은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의 남부를 공략하는 무대가성의 팽창주의였다. 실제로 이러한 팽창주의는 아모이 항구 점령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일본의 공격 일변도의 팽창주의는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는 전쟁의 악순환을 예고하는 것이라고도 보인다.

### 참고문헌

日本外務省 『日本外交書』.

大山梓(1940) 『伊藤博文伝』下, 春畝公追頌会, p.140

\_\_\_\_\_(1966) 『山県有朋意見書』, 原書房, pp.196-197

\_\_\_\_\_(1982) 『伊藤博文秘録』(복간본), 原書防

伊藤博文関係文書研究会(1979) 『伊藤博文関係文書』7권, 塙書房

- 徳富蘇峰(1967) 『公爵桂太郎伝』乾卷, 原書房  
陸奥宗光(1933) 『蹇蹇録』, 岩波文庫  
坂根義久校注(1970) 『青木周蔵自伝』, 平凡社  
信夫清三郎(1942) 『近代日本外交史』, 中央公論社  
井口和起(1998) 『日露戦争の時代』, 吉川弘文館  
ベ.ア.ロマーノフ, 山下義雄訳(1973) 『満州における露国の利権外国史』, 原書房  
信夫清三郎(1974) 『日本外交史I』, 毎日新聞社  
稲坂吉(1929) 『近世支那外交史』, 明治大学出版社  
中塚明校注(1983) 『新頂蹇蹇録』, 岩波書店  
C.F. レーマー, 東亜經濟調査局訳(1934) 『列国の対支投資』  
王紹坊(1988) 『中国外交史』, 河南人民出版社  
말르제모프(2002) 『러시아의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小林道彦(1997) 『日本の大陸政策1895-1914』, 南窓社  
江口圭一(1998) 『日本帝国主義史研究』, 青木書店  
張錫科(2003) 「甲午戦争清政府の軍事外債問題初探」, 『青島職業技術学院学报』16-2  
井口和起(1994) 「大日本帝国の形成」, 井口和起編, 『日清日露戦争』, 吉川弘文館  
김지환(2004) 「제정러시아의제국주의와東方政策의역사적고찰」 『中国学报』50  
이규하 「独逸의膠州灣의租借와喪失」, 『全北史学』7집  
김춘식(2008) 「독일제국의중국교주만식민지문화정책(1898-1914)」, 『역사학연구』32집  
박양신(2001) 「청일전후일본지식인의대외인식론-陸羯南과徳富蘇峰을중심으로-」, 『東洋学』  
31집, 동양학연구소,  
줄고(2001) 「20세기초동아시아국제정세와일본의대륙정책」, 『日本歴史研究』14  
줄고(2002) 「의화단사건과동아시아의정세변화」29

- ❖ 투고일 : 2009. 12. 31.
- ❖ 심사일 : 2010. 1. 11.
- ❖ 심사완료일 : 2010. 1. 20.